■ ‘저출산 시대’ 완도 남녀 19명 정관·난관 복원 수술 1년

매월 정기검진 ‘임신 1호’ 학수고대

“처음에는 딸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많은 가족을 보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더 낳아볼 겁니다.”

지난해 7월 정관복원 수술을 받은 뒤 새 생명의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박필수(39·완도군 완도읍)씨는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 등 외신으로부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완도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실시한 정·난관 복원 의료비 지원의 첫 수혜자였기 때문이었다.

완도군 출산장려 위해 아시아 첫 의료비지원 첫 수혜자 박필수씨 뉴욕타임스 등에 보도 “자녀많은 가족 부러워”

지난해 정관복원 수술을 받은 후 세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박필수씨 가족. 아래는 박씨 인터뷰와 함께 한국·일본·대만·싱가폴·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뉴욕타임스 2005년 8월21일자 신문.

/완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그로부터 1년, ‘가정의 달’인 올해 5월24일 현재 완도군의 지원을 받아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은 19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정관 복원수술을 받은 사람은 박씨 등 10명이며, 난관복원 수술자는 문모(34)씨 등 9명이다.

박씨 등은 8~10년 전 출산억제 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아 정관·난관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 그러나 이들은 국내 출산율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자 또다시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복원수술을 받게 됐다.

이들은 매월 정기검진과 초음파 검사 등을 받으며 새 생명의 출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성들은 매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정충 유무와 정자 활동 검사를, 여성들은 초음파 검사와 자궁암 검사를 받고 있다. 일부는 왕복 6시간 이상 걸리는 광주의 종합병원까지 오가며 검진을 받는 등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하지만 복원 수술을 하더라도 정·난관을 절제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될 경우 임신 성공률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애는 더욱 타고 있다. 박씨의 부인 양은화(37)씨도 복원 수술 후 지난해 12월 임신에 성공했으나 곧바로 유산, 지금껏 내심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첫 도입한 완도군 보건의료원도 걱정이다. 복원 수술비(정관 43만원, 난관 55만원) 지원을 했지만, 1년이 다된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원은 지금도 시술자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를 통한 개별관리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임신 1호’를 기대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황대례(55) 방문보건 담당은 “앞으로도 산모들을 대상으로 무료 초음파 검사, 철분제 제공 및 분만 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거소투표에 대리 기표한 군의회부의장 부인 적발

목포경찰, 수사 확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居所投票) 용지를 입수, 유권자의 의사와는 달리 특정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 경찰은 24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거소 투표자용 투표용지를 받아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자신의 남편을 기표한 신안군의회 김모(54) 부의장 부인 박모(44)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기초의원 ‘나’ 지구 선거구인 신안군 압해면에서 천모(여·74)씨와 김모(여·72)씨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거소 투표자 용지를 가져가 자신의 남편을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자신의 어머니 박모(87)씨의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혐의로 김 부의장의 선거운동원인 신모(47)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대리 투표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안군 지역 거소 투표자 명단을 확보해 대조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거소투표(居所投票)=투표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미리 부재자신고를 한 뒤 투표는 거주하는 집 등에서 투표하는 방식. 선관위로부터 부재자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자택 등에서 기표한 뒤, 선거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광양제철 자회사 직원 가스 중독사

23일 밤 9시10분께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제1연주공장에서 시설을 점검 중이던 포스코 자회사 포스렉(주) 직원 박모(44·광양시 광양읍)씨가 LNG로 추정되는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또 동료 직원 한모(37)씨 등 2명이 쓰러진 박씨를 구하려다 나란히 가스에 노출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박씨는 이날 공장 내 ‘턴디쉬’(제강공장 래들에서 받은 쇳물을 연속 주조기로 흘려 보내는 장치) 내화물의 축조 상태를 확인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작업 규정상 ‘턴디쉬’ 점검은 위험성이 높아 외부에서 실시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박씨가 규정을 어긴 채 내부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5·31 선거 예비후보자 첫 징역형

광주지법, 모집책도 집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법원이 실제로 선거법위반 사범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인신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광주·전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구의회 의원 성모(44)씨와 모집책 문모(여·3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구의원을 사직,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성씨가 무등록 선거사무원인 문씨를 통해 선거운동원을 고용한 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대가성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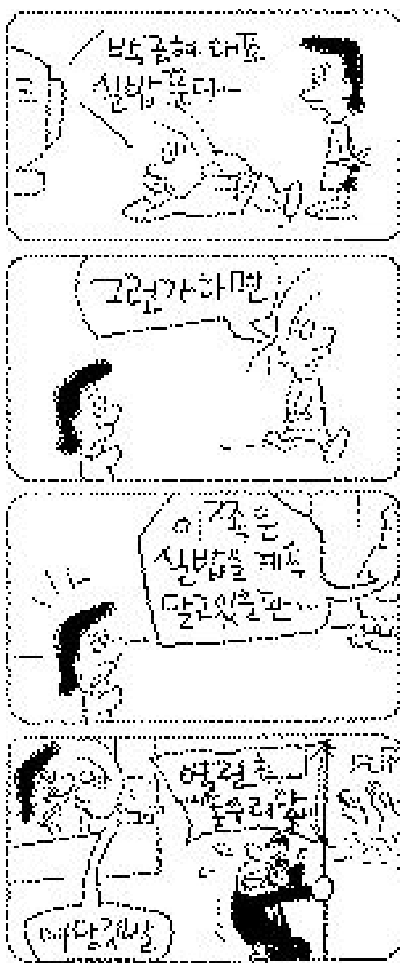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예비후보인 성씨가 지난달 10일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면해줬다.

법원은 또 ▲불법 전화홍보 활동을 한 최모씨(여·38) 등 3명에게는 1인당 벌금 30만~50만원 ▲모집책 문씨를 조사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뒤 행패를 부린 모 정당 당원 이모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성씨 등은 지난 3월31일 전화홍보 요원 6명을 고용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1인당 최고 15만원을 지급했다. 또 전화홍보요원들은 선거구민 1천305명에게 전화를 걸어 성씨의 동생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당부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6837〉



남성 모텔유인 금품 가로챈 부부 ‘덜미’

쌍나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가로채 온 부부 등이 경찰에 덜미.

○…목포경찰은 24일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강모(26)씨와 부인 정모(20)씨, 한모(24)씨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부인 정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조모(29)씨를 목포시 옥암동 B모텔로 유인했으며, 남편 강씨 등은 모텔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흉기로 조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휴대전화·승용차 등 1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강씨 부부는 이외에도 전국을 돌며 정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을 원조교제라고 협박, 61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의 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